

민주자치 발전포럼

6 부산광역시

“2019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2019년 3월 26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이음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의회

주관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당 대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 해 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부산 민주자치발전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님,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그 실천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추어 민주연구원 내 자치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방혁신 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들께서는 과감한 변화를 택했습니다. 두 번의 낙선을 딛고 다시 도전한 오거돈 시장님을 필두로 38명의 시의원과 13명의 구청장, 그리고 104명의 구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직후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라고 술회 하셨습니다. 부산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옮겨내야 하는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의 성공이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이끄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한 부산의 연결과 혁신, 그리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데 당력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이곳 부산을 시작으로 지방 혁신과 국토 균형 발전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뿌리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2019년, 민주자치발전포럼의 더욱 다양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바탕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6.

이 해 찬.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인사말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전 재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민주연구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함께 주최하는 ‘부산 민주자치발전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의 현안을 청취하시고자 직접 자리해주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그리고 본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은 지난 1995년 광역시로 승격되어, 지난 30여년 간 대한민국 제 2의 도시로써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력산업의 부재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우리 사회가 가진 갖은 문제들의 첨단에 놓인 곳이 또 부산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선포된 ‘부산 대개조’의 비전을 비롯하여, 지난 해부터 시행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근거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기존 혁신지구의 강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 등 부산의 당면 현안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치며 우리당에 전례 없는 큰 기대와 또 무거운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부산광역시의 2019년 핵심산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과 그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도 기탄없는 의견으로 본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비롯해, 부산의 현안들에 있어 저도 시당위원장으로서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인사말



국회의원

김 두 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산광역시 민주자치발전포럼》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님,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님, 박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님과 도용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맡아 귀한 제언들을 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올 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올 해는 그 새로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셨고, 당·정·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한국경제 발전과 함께 했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부산 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시켰고, 민자사업인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정부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숙원 예산과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해 나가고 있고, 지난 3월 13일에 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도 이미 마쳤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 증액 및 확정을 위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노력들은 ‘부산대개조’를 선언한 부산의 비전을 실현하고, 부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시는 것은 지역의 현장이고, 그 변화의 힘도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아나고 국민의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와 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정책들이 지역의 현장 곳곳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민주자치발전포럼은 지역현장의 변화와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역의 현안사업들과 발전 방향 및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반영해 나간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민주자치발전포럼을 통해 부산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저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의 현안들을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오늘의 귀한 제언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들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산광역시 민주자치발전포럼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연구원장 인사말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님, 전재수 부산광역시당 위원장님,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지방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발제를 맡아주신 윤정노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님, 도용희 부산광역시의원님, 토론을 맡아주신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님,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님, 그리고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문병주 수석연구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연구원 내에 설립된 자치발전연구센터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발전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영남권 지역의 정책·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특화정책 개발에 집중하고자, 지난 해 말 경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창원과 통영, 울산을 거쳐 오늘과 내일은 부산을 찾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우리 당은 강령과 당헌·당규에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된 소중한 가치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큰 주춧돌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8일,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함께 잘 살아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이 곧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성공이라는 자세로,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아 해양수도를 목표로 하는 부산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나아가 포용국가 비전을 완성시키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장 축사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실천방안을 모색을 위한 '부산 민주자치 발전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및 민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시대가 동시 전개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혁신과 국가발전을 견인하고자 부산대개조 비전을 선포하고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을 넘어 동남광역권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을 비롯한 동남광역권은 과거 수도권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서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밑받침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돼 국가발전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제임스 토빈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수도권은 자신의 힘에 못 이겨 무게중심을 잃고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커다란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발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광역 거점도시 육성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광역권은 신남·북방정책의 접점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동남광역권이 경계를 넘는 협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축사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박 인 영

지역 현안 발굴과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천방안에 관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의견을 함께 나뉘보게 될 2019 부산 민주자치발전포럼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주신 김민석 원장님과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대의원님,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부산시에서는 부산을 통째로 바꾸자는 대개조 선언을 통해 부산 재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연결, 혁신, 균형이라는 가치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새로운 일들을 야심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지 말고 지역에 나누자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빗어지는 불평등과 비효율이 해소되고,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은 평등·공정·정의입니다. 이들 가치가 분권과 지방자치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번 포럼이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방안을 풍성하게 논의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견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발제 1]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부산대개조	13
--------------------------	----

윤정노 부산광역시청 기획담당관

[발제 2]

부산광역시의회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21
---------------------------------------	----

도용회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토론 1]

부산대개조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51
--------------------------	----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 2]

민선7기 오거돈 시정 진단과 과제	57
--------------------------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발제 1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부산대개조



윤정노
부산광역시청 기획담당관



시민의 행복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부산대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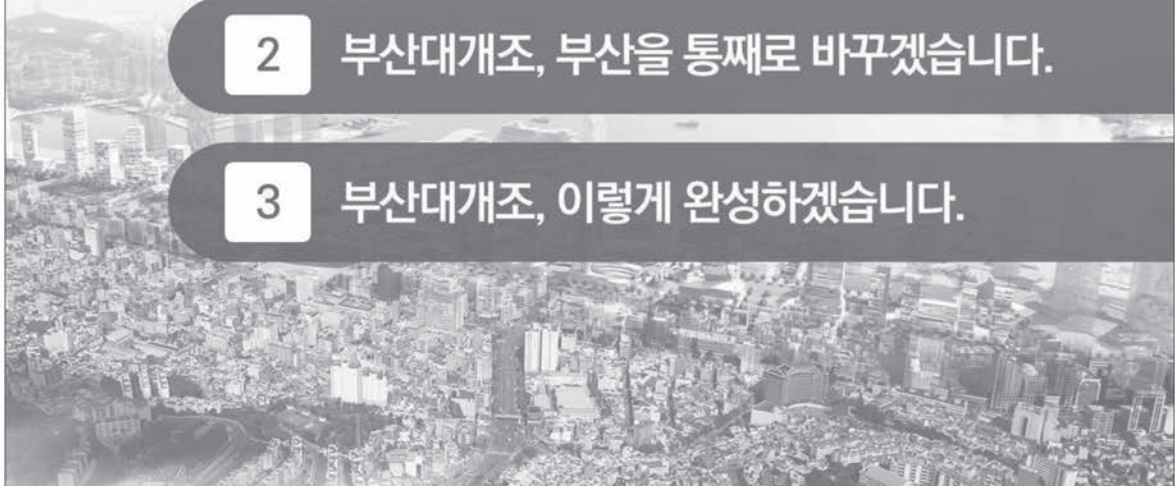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했던 사상공단의 폐공장에서
부산대개조 비전 선포식 개최 ('19. 2.13.)





시민의 힘으로
동북아 평화의 부산

- 1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 2 부산대개조,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 3 부산대개조,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1.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부산대개조

~ 1970년대 초반

1970년대 중반 ~

대한민국 산업화의 전초기지
대기업 발상지, 신발·목재 등 발달

정부 성장억제와 국가 전략산업 육성 대상 제외
항만,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로 도심공간 단절



도시 활력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대개조 필요성 제기

2. 부산대개조,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부산대개조

부산대개조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비전 제시

단순 외형적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과 일상의 현장을 되살리는 도시 변화 지향

도시 단절문제 해결

연 결

4차 산업혁명 선도

혁 신

국가-지역 불균형 해소

균 형



2-1 부산대개조,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단절된 도시공간을
안과 밖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 철로로 단절된 도심지역(북항-범천-사상-덕천)을 친환경 녹지, 청년창업, ICT·콘텐츠산업 공간으로 조성
-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35억원 확보



2-2 부산대개조,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부산을 위해
국가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사상공단, 북항·영도지구, 문현지구, 센텀 1·2지구 등
부산 전역으로 스마트시티 확대



국가와 도시 내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와
서해·남해·동해 고속도로를 U자형으로 연결
전국 고속도로 순환 체계 완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부산이 선도하겠습니다.



북한개발은행 부산 설립

- 북한 개방에 대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안정적 자금 지원
- 정부 주도하에 국책은행, 국제금융기구 참여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

스마트시티 교류협력사업

-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에 북한 큰 관심
-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등 스마트시티 교류협력사업 부산 주도





3. 부산대개조,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부산대개조

북항 일원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동부산과 서부산의 양 날개를 활짝 펴고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겠습니다.



부산대개조 완성은
대한민국 지역 혁신의 마중물로,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발제 2

부산광역시의회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도용회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 부산 민주자치발전포럼



2019 부산 민주자치발전포럼 정책토론회 발제문

부산광역시의회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목 차 ❏

I. 부산시의회 시정 시행과제-----	1
II. 상임위원회별 연초 핵심사업 -----	11
III. 특별위원회별 활동사항 -----	18
IV. 주제별 토론회 활동사항-----	25
V. 마치며-----	26

I. 부산광역시의회 시정시행과제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시정 시행과제

- ① 부산시민의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 ②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에 유치하자
- ③ 남북평화의 시대에 발맞춰 유라시아철도 및 도로의 출발점이 부산임을 명확히 알리자
- ④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전국체전유치 등 행사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면, 현 정부에 적극 요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 ⑤ 부산이 문화와 관광을 통합한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⑦ 소득불평등의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 방지, 노동존중 부산을 만들어나간다.
- ⑧ 민선7기 오거돈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치를 강화해 나간다.
- ⑨ 미래를 여는 부산교육을 표방한 교육청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논의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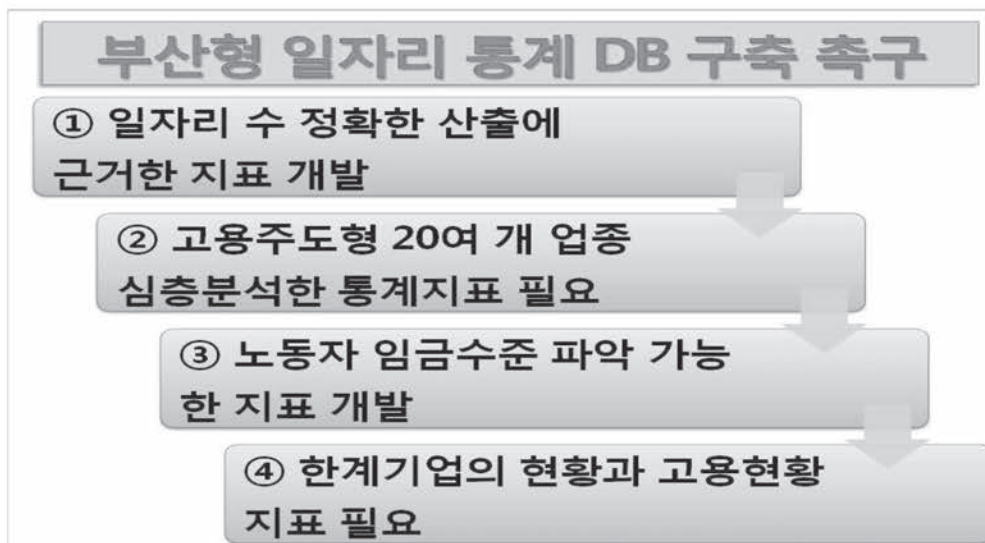
1. 민생과 일자리 창출 노력

□ 원내대표 발언 중 “2018년 12월 부산일보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부산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의 질문에 36%가 일자리 창출을 선택하였습니다. 체감경기 측면에서 부산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의원 또한 느낍니다. 따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산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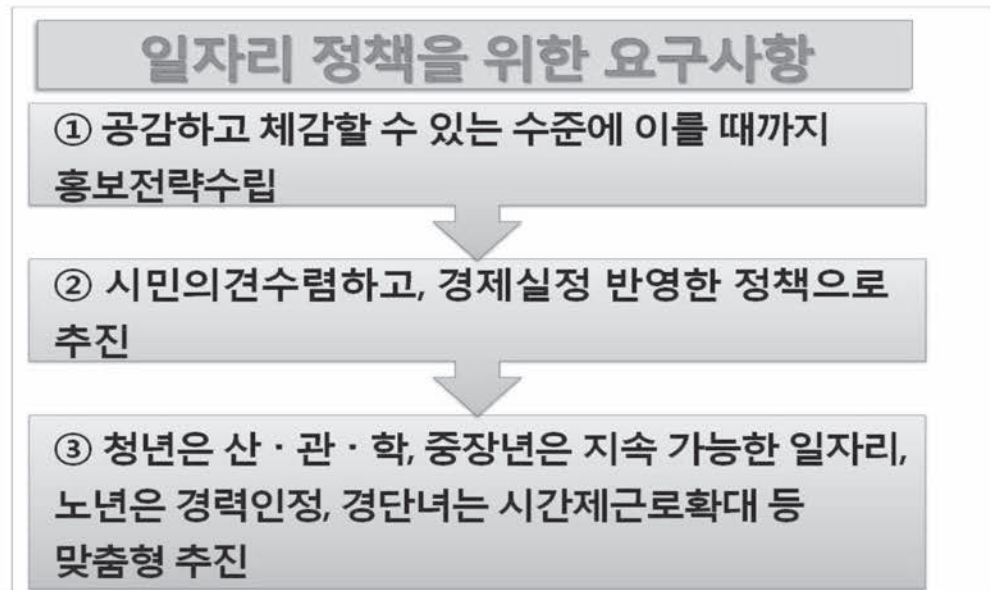
□ 연초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 돌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의원들의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약속에 대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 275회 임시회를 통해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은 ‘부산의 일자리 실적결과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였는데, 일자리 실적 통계가 정형화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된 자료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음 : 부산시는 일자리 통계의 허수를 제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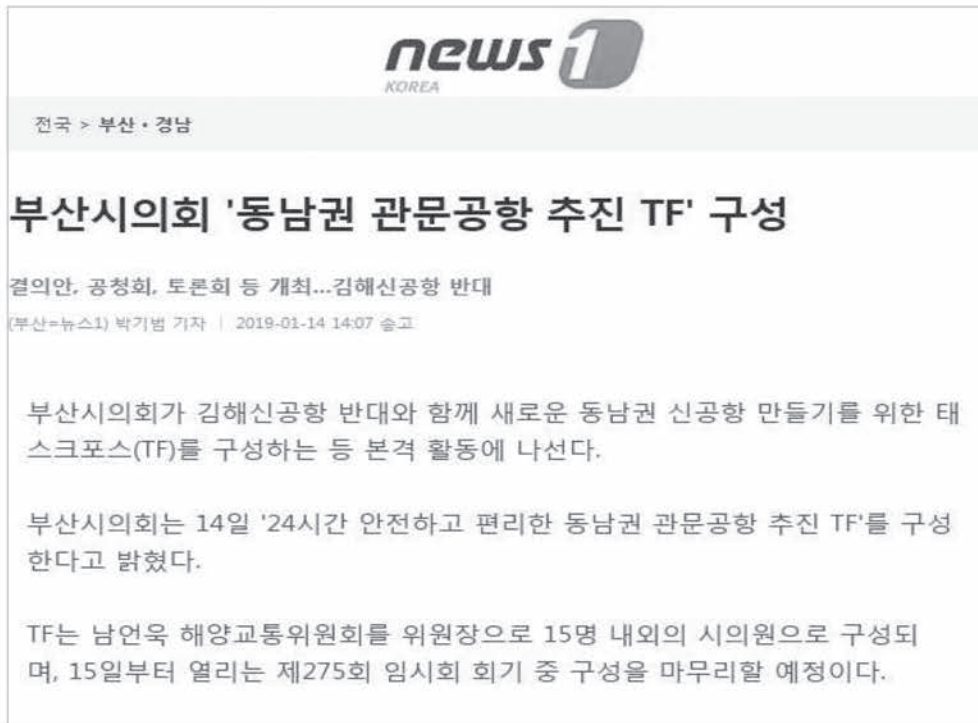


- 275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은 ‘부산시 일자리 정책 체감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5분 발언을 하였는데, 부산시민이 체감하지 못한 일자리 정책은 전적으로 부산시의 책임이라고 지적하였음



2.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

- 원내대표 발언 중 “김해신공항 확장방안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 백년지대계의 문제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검토 방안을 신속히 정부가 내놓게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부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부산시의회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TF’를 구성하여 본격 활동을 하고 있음
 -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10명의 시의원들이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TF’를 구성
 - 부울경 공동 TF의 김해신공항 검증작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동의하고,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려 새로운 공항 필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으로 활동하고 있음



3. 유라시아철도 및 도로의 출발점

- 원내대표 발언 중 “즉 부산이 한반도중단철도(TKR)의 출발지역이 될 것입니다. 중국·시베리아횡단철도(TCR·TSR)가 연결되면서 북한 원산과 해상운송로 확보를 통해 육로와 해로, 관문공항인 항로 등이 이어지는 트라이 포트(Tri-Port) 시대를 부산이 열어야 함과 동시에 환태평양시대 중심축으로 부산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부산시의회는 부산이 유라시아철도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남북관계 평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대륙으로 향한 부산의 미래를 위해 “오랜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평가와 변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 준 남과 북, 미국 정상들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부산시의회 "평화·번영의 시대 열린다" 북미정상회담 환영

"대륙 향한 부산의 꿈 키운다" 부산발전 기대감도 전해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9-02-26 14:14 송고

기사보기

네이버의견

좋아요 0개

공유하기

Tweet

More

인쇄

확대

축소



부산시의회 전경 ©News1

부산시의회가 26일 "350만 부산시민과 함께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기대감을 전했다.

4. 각종 행사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원내대표 발언 중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모두도 국제행사 유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유치로 인해 발생될 경제적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이 되는 순간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나눠갖기를 희망합니다."

□ 부산시와 함께 2023년 전국체전 부산유치 결의대회를 위해 출범식을 열었음

- 부산유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를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개최에 대한 염원을 담고 출범식을 진행하였음
- 전국체전 부산유치는 부산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였음

5.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 원내대표 발언 중 “부산일보의 신년여론조사에서 부산시가 지향해야 할 부산의 미래상으로 동북아해양수도와 더불어 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관광은 현재 및 미래의 먹거리로 시민 및 전문가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의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경제문화위원회는 문화관광 통합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 소상공인 생활안정 강화, 남북교류협력과 북방 및 남방경제의 선도도시 도약을 의정과제로 추진함
 - 경제문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산시 정책과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음

6. 적폐청산과 정의와 공정이 존립하는 부산

□ 원내대표 발언 중 “부산인 LCT 허가문제, 오시리아 관광단지개발, 센텀2지구개발 등에서 보듯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산시민이 의구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도시개발 조사특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최대한 밝혀내어 정의로운 부산을 만들 것입니다.”

- 부산시의회는 센텀2지구를 비롯하여 시민중심의 도시개발 조사 특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밝혀내는데 활동을 하고 있음
 - 센텀2지구의 경우 시의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부산시와 대책위원회 간담회, 시민중심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을 해소시키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

- 센텀2지구 사업은 ‘개발’과 ‘특정기업 특혜’논란으로 부각되어져 있는데, 직접 현장을 보고 문제점에 대해 파악한 후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7. 노동존중 부산

□ 원내대표 발언 중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더 큼니다. (중략) 소득불평등의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생활임금의 안착화, 위험의 외주화방지 등은 노동존중 부산이 만들어질 때 가능합니다.”

- 부산시의회는 노동존중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비가 미비한 것부터 완성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과 노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부산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였음
- 이동노동자 쉼터를 위한 운영 조례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등도 준비 중에 있음

홈 > 뉴스 > 사회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노동인권 존중하는 부산으로 거듭나야"

신성현 기자 | singlerider@leaders.kr



승인 20190115 13:31:57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이 선제적으로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7·80년대에서나 발생한 노동탄압이 21세기 최첨단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개탄스럽고 노동이 존중되는 부산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도 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제2, 제3의 고(故) 김용균님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데, 부산시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부산의 노동자들을 부산시가 지켜주는 노동존중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견제·감시와 협치 강화

□ 원내대표 발언 중 “민선출범 23년만에 부산시도 부산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방권력이 교체되었습니다.(중략)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중략) 부산의 미래 먹거리 및 백년지대계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부산시의회는 8대 의회가 출범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이 부산시와의 협치였음

- 100일 기념으로 부산시와 공동주최로 공연무대를 하였는데, 부산시정 전반에 걸쳐 부산시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므로 서로 협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한 행사였음

부산일보

BUSAN.com

[시의회는 지금] 부산시와 '협치 콘서트' 준비 중

입력: 2018-10-08 [17:55:36] 수정: 2018-10-08 [19:27:42] 게재: 2018-10-08 [19:27:42]

부산시의회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부산시와 공동주최로 공연무대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시의회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4시 시청 1층 로비에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주제의 콘서트를 개최한다.

부산시와 여야 시의원이 함께 하는 무대를 마련해 소통과 협치를 부각시킨다는 것이 이번 콘서트의 목적이다. 또한 권위적인 모습을 벗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이 직접 공연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의미도 가진다.

9. 미래부산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건설

□ 원내대표 발언 중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니다. 지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청과 함께 ▲고교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지원, 그리고 ▲중학교 입학생 첫 교복지원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19년에도 부산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나갈 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은 ‘생애 첫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의회는 고교무상급식과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음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의회가 서로 무상급식 협치를 이뤄냈음
 - 학생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추진
 - 고교 2,3학년은 현행처럼 저소득층 25%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며, 2021년에는 전면 무상 급식할 예정



부산시, 시의회, 교육청 무상급식 협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시정목표 및 중점추진 전략

목표

시민과 함께, 시민행복 시대를 여는 원년 실현



전략

사람우선-경제 살리기-삶의 질 향상의 시민행복 생태계 정착

전략1

[일자리]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 ① 지역경제 체질 혁신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 ②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민선7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 실현)
- ③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 신산업 창출(스마트제조혁신, 수소경제 등)

전략2

[해양수도]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변화와 재도약

- ① 한반도 평화시대 대응 유라시아 관문도시 본격 추진
- ② 북항 일원 동북아 해양수도 중심축 개발 가시화
- ③ 2030 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확정 및 유치 본격화

전략3

[사람중심] 사람중심의 도시경쟁력 강화

- ① 사람안전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시민안전 및 도심보행환경 혁신 등)
- ② 사람중심의 원도심 및 노후철로 재생으로 도시공간 혁신
- ③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인프라 획기적 개선

전략4

[삶의 질]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도시

- ① 출산·보육 환경 개선, 저출산 문제 해결
- ②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복지 확대 강화
- ③ 시민주도의 문화예술 도시 환경 조성

전략5

[시정혁신] 시민중심의 시정혁신으로 일하는 조직

- ① 시민중심·시민소통의 열린시정 환경 실현
- ② 일과 성과 중심의 시정 시스템 구현
- ③ 시민참여 열린재정 실현 및 공공기관 혁신 이행

II. 상임위원회별 연초 핵심사업

상임위원회별 연초 핵심사업

① 기획행정위원회

- 지방자치분권 실현
- 부산시 채무감축 및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정착

② 경제문화위원회

- 문화관광 통합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
- 소상공인 생활안정 강화
- 남북교류협력, 북방경제, 남방경제의 선도도시 도약

③ 복지환경위원회

- 복지정책 시민체감도 제고
- 부산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 맑은 물 확보 및 취수원 다변화

④ 해양교통위원회

- 해양자치권 확보 및 해양산업 육성 추진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해양·물류 선제적 역할 수행
- 대중교통 관련 운수보조금 재정건전화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여건 조성

⑤ 도시안전위원회

- 원전·소방·재난관리 등 도시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현장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 시민이 만족하는 부산형 건축·주택·도시재생 추진

⑥ 교육위원회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포럼 개최
-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미래교육 활성화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균형 발전

1. 기획행정위원회 핵심사업

1) 지방자치분권 실현

-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2) 부산시 채무 감축 및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 채무 총량 관리 등 채무·부채의 탄력적 관리를 통해 능동적 재정운영 및 재정여력 확보
- 사업성과, 집행수준, 우선순위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등 재정사업 구조조정
-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 대책으로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법령 또는 근거 없는 보조금 사업 일제 정비

3)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정착

- 시장 직속의 ‘감사위원회’설치, ‘시민감사 옴부즈맨(Ombudsman) 위원회’운영 등 자체 감사 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및 시민 권익 보호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통합·개편을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신고자 보호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

2. 경제문화위원회 핵심사업

1) 문화관광 통합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

- 문화의 생산적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와 관광을 연계·통합하는 관광콘텐츠 구축
- 부산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 개별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을 위해 부산관광 포털과 연계 등 관광 유패스 시스템 마련

2) 소상공인 생활안정 강화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지원확대
- 소상공인 실태조사 강화 및 지원 사업 이용 실태조사 실시
-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밀착형 현장홍보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남북교류협력, 북방경제, 남방경제의 선도도시 도약

- 대륙철도망의 최남단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유라시아 철도의 시·중착지가 되어 북방정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를 통한 신남방정책 핵심가교 역할 수행
- 남북교류협력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3. 복지환경위원회 핵심사업

1) 복지정책 시민체감도 제고

- 복지수요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체감도·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음
- 현재 실시하는 복지·보건 정책에 면밀한 평가와 체감제고 대책 마련 필요
- 고독사 예방의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안 마련
-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지원체계의 강화

2) 부산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공원·녹지 등 보전대책
- 용역결과에 따른 일몰제 대상 재정비
- 도시공원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재원 마련
- 토지은행제도 도입 등 시민공감 대책 공론화

3) 맑은 물 확보 및 취수원 다변화

- 광역상수도 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 간 갈등해소 마련촉구와 정부주도의 객관

- 적이고 공정한 재평가 요구
- 새로운 취수원 다변화 추진
-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 촉구
- 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연구

4. 해양교통위원회 핵심사업

- 1)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 및 해양산업 육성 추진
 - 항만개발 관리권 지방이양
 -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
 -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권한 지자체 이관
 - 극지타운 조성을 통한 부산항 국제 경쟁력 제고
 - 해사전문법원 설립으로 해운지식 서비스산업 도시 성장기반 마련
 - 해양관광산업 특화 육성을 통한 해양수도 기반 조성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 해양·항만 관련 산업 창업·지원·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STEM빌리지조성 등)
 - 동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력기업 유치로 해양산업 활성화
-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지자체 지원의 해양·물류 선제적 역할 수행
 - 한반도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 해양도시간 항만물류분야 교류협력사업 전략 및 정책과제 발굴
 - 항만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확대
 - 남북수산교류협력 위원회 운영 및 공동수산자원관리 공동 연구
 - 남북공동 기술협력 및 공동 생산 수산물 수출의 新 실크로드 조성 등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 적극 협의
 - 유라시아관문 기종점 초석 마련 집중

3) 대중교통 관련 운수보조금 재정건전화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여건 조성

- 준공영제 혁신 및 재정적자 개선
-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종합개편
- 도시철도 노후화 시설교체 및 손실분 국비확보
- 공사·공단 내부 혁신 유도 및 강화

5. 도시안전위원회 핵심사업

1) 원전·소방·재난관리 등 도시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안전점검 및 감찰 추진 현황
- 재난상황조기경보체계(원-클릭) 고도화 현황
- 재난방재시설 건립 및 관리·유지
- 자연·사회재난 대응체계
-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및 공개, 조치
- 원전폐로 및 원전안전정책 추진 현황
- 원전해체산업 및 관련산업 육성 방안 등

2) 현장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 부산권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 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목표제 추진
- 낙동강 델타지역~원도심 연결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소
- 지역업체 육성 및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추진
-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등

3) 시민이 만족하는 부산형 건축·주택·도시재생 추진

-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도시재생 뉴딜사업
-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 쇠퇴 원도심 기능회복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국가지원 도시재생 사업
-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등

6. 교육위원회 핵심사업

1)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포럼 개최

□ 민주시민포럼 개최

- 목적 : 자율과 참여의 민주시민교육
- 시기 : 2019년 3~10월
- 방법 : 교육청과 공동 개최
- 사전 협의회 개최
- 교육위원회, 교육청,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 기대효과
 -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시민교육 내실화

2)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미래교육 활성화

□ 미래교육 현장 실행 모니터단 운영

- 시기 : 분기별 또는 상시
- 장소 : 교육현안 거점 현장(학교 등)
- 참여 : 시의회, 교육청, 학교, 학부모, 학생 등
- 운영 : 메이커 및 스팀 등 미래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현장 효과성 분석 및 개선점 도출

3)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균형 발전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운영

- 목적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균형발전
- 구성 : 의정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의회,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 중심
- 방법 : 상설 협의체 구성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기대효과
 - 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 확대 실시
 - 무상교복·급식, 수학여행비 지원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Ⅲ. 특별위원회별 활동사항

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민의원이 맡고 있음
- 2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였고, 2019년6월까지 1년간 운용

② 인사검증특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마련과 613 지방선거로 나타난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
-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의원이 맡고 있음
- 6개월간(2018년9월12일~3월15일) 활동

③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현황과 의사결정과정을 점검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구성
- 2018년10월26일~2019년10월25일까지 운영
-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의원이 맡고 있음

④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시민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경제문화위원회 박동혁의원이 맡고 있음
- 2018년10월26일~2019년10월25일까지 운영

⑤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의원이 맡고 있음
- 2018년11월12~2019년11월11일까지 운영

연번	특별위원회	중점추진 계획
1	민생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실효성 확보 · 중소기업 지원조례 정비 등 - 골목상권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보 - 고용의 양극화 및 이중노동시장의 해소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실태 점검 - 취약계층의 노동권익 보호 · 청년일자리창출정책 실태 조사 및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등 - 사회적 경제의 확산과 공공요금의 안정 ·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2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에 전반적인 점검, 조사 -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 대규모 개발사업간의 차별화 전략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방안 도출 ※ 조사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및 산하기관 - 대상사무 : 부산광역시 개발사업 종합관리실태 및 5개사업 (오시리아 관광단지조성사업, 북항재개발사업, 센텀2지구 도시첨단사업단지, 산복도록 르네상스 프로젝트,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
3	남북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체 역량강화 · 남북교류협력특위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민관협력 모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성 · 북측 관련 기관 등과 자매결연 · 부산 스포츠대회 북한 선수단 초청 등 체육교류 사업 · 부산 신발기업 개성공단 진출 지원 사업 등 -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개성공단 입주 부산기업 지원 조례 제정 ·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 ·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제도화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2018년11월7일~8일 주요 투자사업장 8개소 방문
주요내용: 투자사업 추진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등



2019년3월5일 광주광역시의회 방문
주요내용: 예결위원회 심사 및 광주형 일자리 등 주요 사업 비교를 통해 부산유사 분야 발전방안 토론

2.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사항



2019년01월14일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회 실시
주요내용: 경영수행능력, 정책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포함해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음

리더스경제신문
로그인/회원가입
회원탈퇴

홈 > 뉴스 > 뉴스 > 정치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오거돈 시장은 엘시티 관리 받던 인사 지명 철회해야”

2018년 10월 23일 (화) 16:25:52 신성한기자 singerider@leaders.kr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특별위원회가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스폰서 이사장·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자가 엘시티 측으로부터 장기간 선물을 받은 것을 이유로 오거돈 부산시장의 인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위는 지명철회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검증회 이후 최종보고서 채택 때 부적합 인물로 판단한 보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산하 특위위원장은 “시장이 시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할 때 미리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점, 인사검증회가 진행되는 당일에는 비위 의혹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기록을 보낸 점 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산시는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석고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

센텀2지구 개발 진단과 해법! 센텀2지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9. 3. 15.(금) 14:00 ~ 16:10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

주 최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좌 장	이 현 위원 (부산시의회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제발표	발표1.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2. 「센텀2지구 행정사무조사의 방향」
토 론	이남기 부장(부산도시공사) 노정현 위원장(민중당 부산시당) 양미숙 사무처장(부산참여연대) 김윤희 부위원장(반송1동 주민자치위원회) 박은경 위원(센텀2지구 공익개발 주민추진위원회(준)) 이승희 교수(경성대학교) 정주철 교수(부산대학교)

4.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최저임금제 · 근로시간제 노동현안과 부산시의 해법

- 일시 : 2018년 12월 27일 (목) 15:00~18:00
- 장소 : 부산시의회 대회의실(2층)
- 주최 :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부산시의회
의정연구단체 '공공의 벗',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 사회 : 도용회 의원(부산시의원)

❖ 좌장 : 송강직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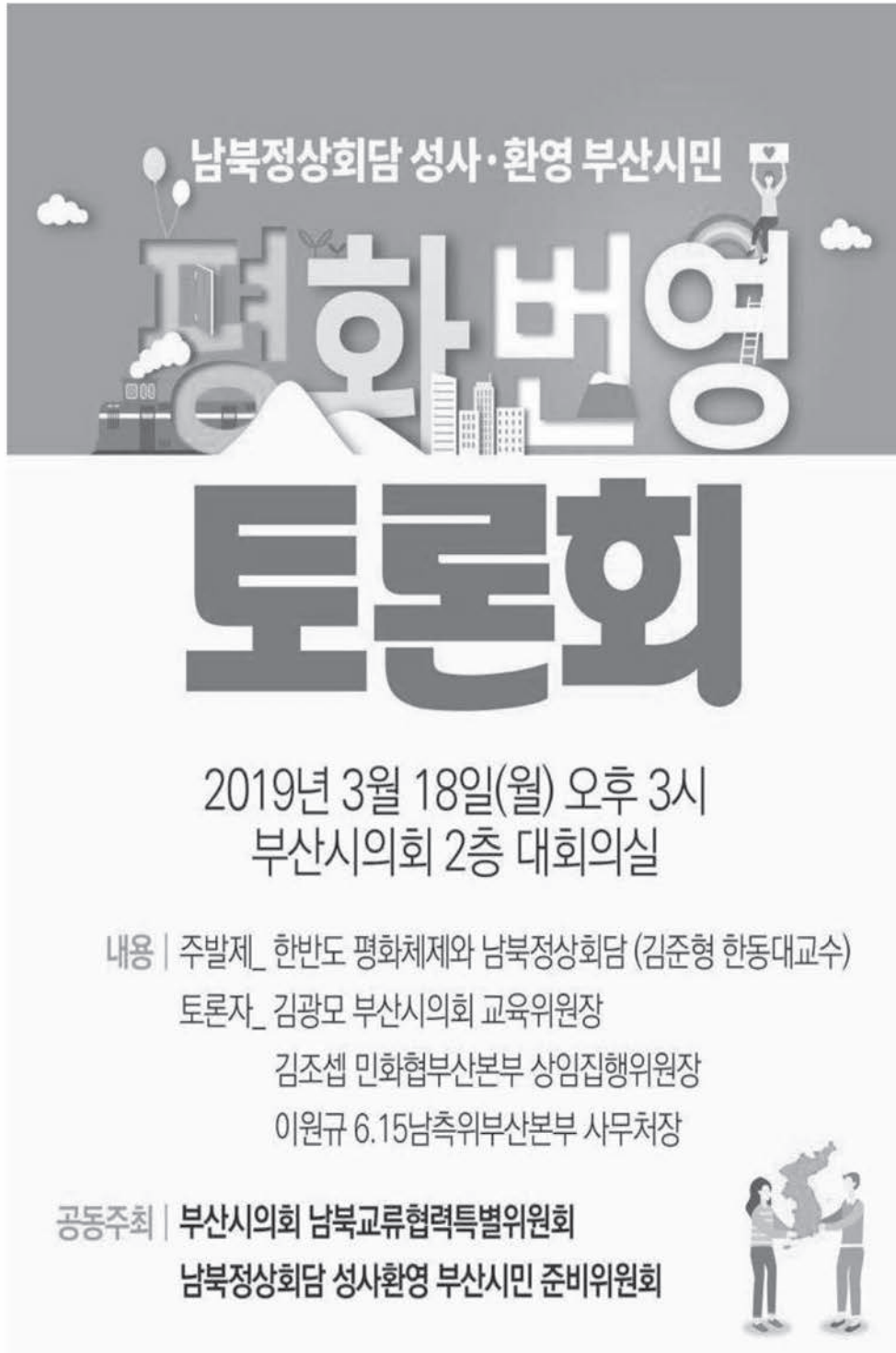
1. 최저임금제도의 노동법적 의미와 입법정책적 개선방향
(권혁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주52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허병도 박사/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 토론자

- | | |
|----------------------------|---------------------|
| - 석병수 부산본부장(공공운수노조) | - 김덕중 본부장(부산경영자총협회) |
| - 곽동혁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부산시의회) | - 양미숙 사무처장(부산참여연대) |
| - 최수영 사회통합담당관(부산광역시) | - 이재현 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

의회

5.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남북정상회담 성사·환영 부산시민

평화번영

토론회

2019년 3월 18일(월)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내용 | 주발제_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 (김준형 한동대교수)
토론자_ 김광모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조섭 민화협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원규 6.15남측위부산본부 사무처장

공동주최 |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남북정상회담 성사환영 부산시민 준비위원회

Ⅳ. 주제별 토론회 활동사항

부산시의회 주제별 토론회 활동사항

- ①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 ② 「자치구·군 청소대행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③ 「지방분권」 정책토론회
- ④ 「미래교육과 시민교육」 토론회
- ⑤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운영모델 제시」 토론회
- ⑥ 「정책이주지 재생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⑦ 「BRT(간선급행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
- ⑧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경제」 토론회
- ⑨ 「수소연료전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 ⑩ 「부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 정책 토론회
- ⑪ 「부산광역시 갑질근절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 ⑫ 「아동 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⑬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 정책 실무 토론회
- ⑭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⑮ 「센텀2지구, 시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책 토론회

V. 마치며

시정 핵심사업 추진 약속에 대한 성과

전략① [일자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 민생을 책임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면서 집행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전략② [해양수도] 해양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해양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음

전략③ [사람중심] 행정사무조사특위, 기획행정 및 경제문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전략④ [삶의 질]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갑질 근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복지확대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함

전략⑤ [시정혁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협치하여 전국체전유치, 남북평화통일기원, 한·아세안정상회의유치 등에 한목소리를 내고, 시민중심과 시민소통의 열린시정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SNS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소통하는 시정·시의회로 거듭나고 있음

토론 1

부산대개조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대개조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진시원(부산대학교 교수)

1. 연결, 혁신, 균형: 참 좋은 아이디어다.

부산대개조,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은 아닙니다. 오래 전에 권철현 전주일대사가 이런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번 오거돈 시장의 부산대개조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연결, 혁신,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좋습니다. 단전될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부산의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내용은 상당히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는 부산의 정책도 포함시켜 부산시가 현재적 입장에서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을 그랜드플랜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2. 연결

부산은 지금까지 하나의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단절과 분절로 인해 연결되고 통합된 도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부산에는 교통 단절뿐 아니라 삶의 질, 교육의 질, 인프라의 질 등에서의 심각한 지역불균형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는 부산을 하나가 아닌 분단된 지역으로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키워드는 상당히 바람직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 단절을 해소하여 부산의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작업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고속도로와 서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부산을 사통팔달로 연결된 대동맥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도심로를 건설하여 부산을 가로막고 가로고 있는 교통장애물들을 철거하는 노력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경부선지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철로가 21세기 부산에 존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북항개발을 하더라도 철로가 가로 막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북항개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결이라는 가치에 담아야 할 핵심 가치는 말 그대로 단절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체의 핏줄이 한 곳에서 막혀 있다면 건강한 심체가 아닙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경화나 담 같은 근육뭉침 없이 피가 잘 흐르는 대동맥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특히, 경부선 지하화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도움으로 그나마 지금 연구비라도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상공단에서 열린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 인사말에서 “시민의 염원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통령 발언이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는 원래 경부선 철로 지하화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준비 미숙으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숙함은 없어야 할 것이고, 이제 시작단계이고 오거돈 시장 공약사업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답하신 이상 중요한 것은 비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이 되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준비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부산시민들과 정치인들의 초당파적인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언어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질 때 더욱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혁신

스마트시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산업들, 즉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도시의 공공기능과 편의시설 등에 적용한 미래도시를 의미합니다. 지금 세계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은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는 신도시형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도시형 스마트시티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에코델타시티뿐 아니라 사상공단, 센텀1,2지구, 북항, 영도지구, 문현지구 등 부산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계획은 중앙정부의 안인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화를 훨씬 넘어서는 상당히 거대하고 장기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 스마트시티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어야 하는 관계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의 핵심지역을 모두 스마트시티화 한다는 약속은 실현성 측면에서 조금은 너무 나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기술 중심주의로 가다가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들 간에 정보통신기술 격차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기술 격차는 스마트시티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저 눈에 띄므로 보는 사람을 양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접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손쉬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스마트시티가 부유층과 특권층만을 위한 도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둘째, 역시 민관협치 즉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데도 사람 중심으로 시민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과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결

정, 공동집행, 공동평가, 공동책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서 우러난 살아있는 경험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 균형

혁신은 소수 엘리트 만의 혁신이어서는 곤란합니다. 혁신, 특기 기술 혁신은 소수 엘리트가 주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시민과 주민이 배제된 혁신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혁신은 반드시 대중성과 사업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중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협치 즉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서부산 지역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발전의 근본원인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부산 지역 간 격차와 단절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정치인들이 동서격차를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진정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접근하기보다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고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산의 서쪽은 지금도 지난 기간 많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력격차, 산업단지로 인한 생활환경 문제, 경유를 쓰는 대형화물차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체증, 부산도심에서 먼 지리적 거리, 낙후된 인프라, 다대포해수욕장 등 저개발된 관광자원 등으로 인해 부산 도심이나 해운대에 비해 저개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인해 서부산 지역은 저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부산신항 등으로 인해 많이 변화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대개조를 통해 도로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력격차 해소, 미세먼지 해소, 주거환경 개선, 관광과 여가문화와 시설 활성화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우선 필요합니다.

5. 남북협력

남북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부산의 활력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비핵화 문제로 인해 지금 잠시 표류 중이지만 남북교류협력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지금 부산시도 준비하고 있지만 부산은 더욱 실질적이고 바로 적용가능한 남북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검증하는 준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적용가능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해양수산, 물류항만, 관광, 전시컨벤션, 영화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의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바로 작용할 수 있도록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 경험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제안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산대개조 정책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는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첫째, 비전과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비전이고 계획이니만큼 실현을 위한 부단하고 구체적인 노력과 시간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게 실현가능성을 높여줄 테니까요.

둘째, 부산대개조에는 여야,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산의 여야와 진보보수가 힘을 합쳐 부산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경쟁해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행여나 오거돈 시장의 부산대개조 프로젝트가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선을 위한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공학적인 득실을 떠나 여야 모두가 공조해서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입니다. 선거공학적인 접근은 여야 그리고 여야를 지지하는 시민들 간의 반목을 가져와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동력을 약화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데 장애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서병수 시장님 시기에다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서부산 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부산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넷째, 지금은 민관협치 시기입니다. 관주도의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협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민들의 입장을 잘 듣고, 그들의 입장을 정책에 잘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관협치기구인 부산시민협치협의회를 통해 시민들과 정책 결정과 집행 및 평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치하고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끌어내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책임이 없이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산중앙차로제(BRT)나 오페라하우스 건립 문제에서 이런 민관협치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토론 2

민선7기 오거돈 시정 진단과 과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민선7기 오거돈 시정 진단과 과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1) 들어가며

민선7기 오거돈 시정이 출범한지도 8개월을 넘어 9개월을 채워가고 있다. 부산의 일당독점 구도가 깨어졌고 시의회 역시 절대 다수가 민주당으로 바뀐기 때문에 시민들의 새로운 부산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았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2019년 오거돈 시정의 단연 화두는 부산대개조다. 부산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된다. 그렇지만 부산대개조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 부산대개조에 대한 당위성만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당위성만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개별 사업별로 반대 입장이나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부산대개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위해 지난 8개월간의 시정 평가와 진단을 짚어 보고, 현재 화두인 부산대개조 개선과제와 향후 민선7기 오거돈 시정의 주요 과제를 짚어 보자. 이 토론문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을 정리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 민선7기의 평가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2) 지난 8개월간의 민선7기 시정 평가 및 진단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 지난 8개월간의 몇몇 정책들을 보면 정책들은 민선7기 시정의 방향에 맞게 나름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고교 무상화 실시,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형제복지원 문제, 시민협치 등 기존 민선6기 때 여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민선7기에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의 시정과 정책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구체적으로 아직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민선7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시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전 시정에서 하지 않던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갖고 일을 추진하나 그것이 성과있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모양새다. 이는 시정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기에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

8개월의 시간은 시정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분야인 인사, 소통, 신공향, 정책. 네 가지 부분에서 짚어 보자.

인사는 오거돈 선거캠프 출신과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들에 의해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채워지고 이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된 점이 대표적이다. 그로 인한 내·외부 잡음이 있었고,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에 있어 감동과 기대는 없고 잡음과 갈등만 있는 모양새다.

소통협치 부분은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추진 및 환경회의 구성, 시민원탁회의·제안·회의, 인권위원회·노사민정위원회 등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민선6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한다. 협치에 대한 노력은 관료주의에 입각한 부산시 행정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OK1번가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했다고 하나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무언가를 제시했는지는 의문이다.

김해신공항 문제는 문제점 검증 및 대안 제시보다는 홍보에 치중하고 국토부와의 갈등, 부산시 민 내부의 이견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부재하다. 신공항 문제는 의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현재 부산시민들은 신공항에 상당히 피로감이 높다. 또 다시 민선7기가 이전 시정과 같이 신공항 관련하여 시민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정책의 경우 BRT,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거쳤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재추진하는 가닥으로 잡았다. 시내버스 BRT의 경우 10여 개월 공사 중단으로 인해 예산이 뒤늦게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해 효율성의 저하로 귀결됐다.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공유재산법 위반 지적이 나와 기부채납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국가(중앙정부)에 기부채납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망각한 행정을 오거돈 시정에서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 대표적인 사례다.

미세먼지의 경우 오거돈 시정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 시행령만 기다리면서 자체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법령상의 비상저감조치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좁게 정책을 실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국비사업일 만큼 여전히 자체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19시30분까지 일괄 확대함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올 수 있지만 또다른 보육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부산시와 보육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야기되었다.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는 도지사가 먼저 제안한 경남도와 달리 부산시의회와 시민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내걸고 있지만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예년의 관례적인 모습이다.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상당부분 비중 있게 다룬 분야가 청년이다. 그중 우리마을 청년 보안관 사업은 청년들과 참여 기업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 시행 불과 몇 개월만에 안 좋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파란 일자리 사업 또한 마찬가지였다. 참여자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숙고 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다.

2032올림픽의 부산 유치 문제다.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메가 이벤트에 대

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정적 시각을 갖는 분들이 더 많다. 이벤트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수치로 효과 운운하여 시민들을 유혹하는 이런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3) 부산대개조에 대한 입장

부산대개조를 설명하는 PPT 자료를 살펴보면 ‘도시 활력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대개조 필요성의 제기’,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비전 제시, 단순외형적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과 일상의 현장을 되살리는 도시 변화 지향’이라는 언급이 부산대개조의 정의와 추진사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향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결’, ‘혁신’,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된 부산대개조의 방향성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도시정책의 필요한 과제로서 부산의 특수성과 부산만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흔적보다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들이 처한 현실의 정책적 산물이다. 그렇다면 부산대개조에 대한 목적과 장소, 적격성과 방법론에 대해 좀더 구체화하고 이를 시민들과 소통해서 공감을 얻는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선언적 방식은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다.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자. 먼저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기초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35억 확보’라 하지만 이 국비용역의 정확한 명칭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이다. 부전복합역 개발 내용이 빠졌고 ‘철도지하화 등’이라는 문구가 지하화 이외의 방안도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도 하나의 문제다. 스마트시티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 유발되는 교통·환경·주거문제 및 시설 비효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부산시는 국가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사상공단, 북항·영도지구, 문현지구, 센텀 1·2지구 등 부산 전역으로 스마트시티를 확대할 계획에 있지만 스마트시티로 인한 지역 간 격차(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지역 간 스마트시티의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르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각 유형별 맞춤형 확산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는 스마트시티 자체를 확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불균형 해소 정책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스마트시티 정책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U자형 고속도로 구축 등을 언급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받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3개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75로 타당성이 낮아 사업타당성이 약했으며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는 소형차 기준 약 2,300원대 통행료와 민간사업자 통행료 40년 징수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평화의 번영을 선도하기 위해 북한개발은행 부산 설립, 스마트시티 교류협력사업을 북한과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대북관계, 북미관계 등에 연계되어 유동성이 큰 사업인 만큼 오거돈 시장이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자신의 임기를 떠나서 8~12년 정도의 중장기사업으로 다음 시장까지 넘겨줄 수 있는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이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사상 스마트시티 등은 서병수 전 시장 때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입지(위치)만 바뀌거나 국비 의존을 전제로 하는 등 부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산대개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부산시가 내놓은 대개조 정책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4) 향후 주요시정 과제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거나 바꿀 수 없다는 역설로 귀결될 수 있다. 한 분야라도 제대로 바꾸겠다는 행·재정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 본다.

고도경제성장 시기 부산은 신발·목재와 항만·철도 등이 부산을 상징하는 키워드였다. 그러나 2019년 부산의 현재는 부산을 상징하는 키워드 하나 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 갈등을 유발하는 산적인 현안들이 많다.

부산대개조의 필요성 부재와 내용의 문제, 시정철학의 문제, 구체적인 사업성 제시 등이 앞으로 주요시정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뤄져야 할 주요시정 과제로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서병수 전 시정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한 사업 중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의 경우 그에 따르는 충분한 설명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오거돈 현 시정이 추진하는 정책에서 자체사업, 국비사업 등을 나눠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연내 또는 임기 내 완료에 얽매이지 말고 설명을 하는 절차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부산대개조는 부산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명명하는 것이 중요해야겠지만 이해관계자 및 시민과의 철저한 소통을 거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시정들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불통이다. 오거돈 시정도 불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시정 혁신을 위해 시민참여, 부산시청 각 부서별 조직혁신, 감사관 권한 확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 중심의 시정이 중요하며 말만 시민중심이 아닌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청 각 부서별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혁신방안 창출 등의 시정의 혁신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시정혁신을 위해서 감사관실의 감사관을 민간인사로 뽑는 것 외에 광주처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감사위원회로 승격을 하는 등 감사관의 활성화를 통한 시정혁신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나오며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와 지속가능공동체포럼이 작년 지방선거 이후 민선7기 시정방향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오거돈 시장 20대 공약 중요도와 실행가능성)를 진행하였는데 의미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민참여, 소통, 협치, 일자리, 청년임대주택 정책, 무료 wifi 등 시민중심과 시민들에게 좀더 직접적인 공약들에 대해 중요도가 높게 나왔다. 그리고 해양수산 R&D 글로벌클러스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 2030엑스포, 서부산 스마트케어 클러스터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사업들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7기 오거돈 시정이 한번쯤 눈여겨봐야할 지점이다. 민선7기의 기본 시정이 시민 만족도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시민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결국 소통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

MEMO

MEMO

